# 상가시설 5배 늘려 적자 줄이기…공공성 조화는 과제

#### 청신호 켜진 어등산관광단지 향후 일정과 개발계획

## 광주시 TF 구성 1년여 논의 타당성 검토 계획 대폭 수정 자금조달 쉬운 민간개발 확정

그동안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최 대 난제였던 민간사업자 투자비 반환소송 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어등산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 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재정난과 사 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 등을 포 기하면서 10년이 넘도록 골프장(27홀) 조 성 이외에는 사업 진척없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다.

◇해묵은 분쟁 해소=어등산 개발의 민 간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 측은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금액이 애초 요구한 액수에 비해 크게 적어 아쉬움은 많지만,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알 려졌다. 지역발전 등을 감안해 해묵은 분 쟁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 다. 앞서 어등산리조트 측은 재정난과 사 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300 억원대의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먼저 완공 한 골프장만을 개장했다.

이후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에 부지 기부 가 부당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며 법 원의 조정 결정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어 등산 관광단지 법적다툼은 지난 2012년 1 차 시작돼 지금까지 4년 간 진행돼왔다.

광주시도 조속한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사회 요구 등을 감안해 법원의 결정을 긍 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투자비 지 급 재원은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유원지 부 지 매각 대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토지가격이 최소 600억원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 손실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어떻게 개발되나=광주시는 본격적 인 유원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어등산관광단지를 광주의 랜드마크 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에

당초

145,910 m<sup>2</sup>

24,170m²

120,440 m²

125,130 m<sup>2</sup>

415,650 m<sup>2</sup>

변경

16,123m<sup>2</sup>

129,746m²

144,651m<sup>\*</sup>

125,130m<sup>2</sup>

**415**,650m<sup>2</sup>

증·감

감 129,787㎡

증 105,576㎡

증 24,211㎡

-m²

-m²

■ 유원지 조성계획변경(안)

구분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100	02 1-0 12 122 1
2005. 7. 1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6. 1.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광단지 지정
2007. 4.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009. 4. 29	기반시설공사 착공
2012. 6. 12	민간사업자 1차 소송 및
	법원조정 결정
2014. 5 7	민간사업자 2차 소송 제기
2014. 12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2016. 2	T/F구성·운영
2015. 4~12	유원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전 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추진 전담팀(TF)을 꾸려 1년 여에 걸 친 논의를 거쳤다. 또한,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유원지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도 맡겨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TF팀 논의와 용역 결과 경제성이 떨어 지는 숙박시설은 축소, 사업성이 있는 상 가시설 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자금 조달 및 개발·운영 노하우에서 우위를 가 진 민간개발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는 결과보고서를 확정했다.

기존 사업계획은 696억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대폭적인 사업계 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적정 이익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획이 수정됨에 따 라 광주시가 애초 밝힌 공공성과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는 또다른 과제 로 남았다.

또한, 조선업 구조조정 등 국내 경제의 극심한 침체에다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 장 혼돈, 중국 불황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 로 신규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도 고 민이다.

한편, 광주시는 사업변경을 통해 현안 인 숙박시설의 경우 14만5000㎡에서 1만 6000m'로 10분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상 가시설은 2만4000㎡에서 13만㎡로 5배 가량 늘려 올해 9월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올 연말까지 우선협 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비고

(테마파크,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일지

■ 이승선 현충전시 포경자를 구선될지	
2005. 7. 1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6. 1.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광단지 지정
2007. 4.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009. 4. 29	기반시설공사 착공
2012. 6. 12	민간사업자 1차 소송 및
	법원조정 결정
2014. 5 7	민간사업자 2차 소송 제기
2014. 12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추진
~2016.2	T/F구성·운영
2015. 4~12	유원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더민주 가족채용 두번째 사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관련,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율을 만들어 지켜나갈 것"이라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3당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합의

#### 불체포특권 개선 나서…"면책특권 폐지는 국회활동 위축"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가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 기'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하면서 국회의 원 특권을 줄이는 제20대 국회의 개혁 작 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문기구는 개혁의 대상인 국회의원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분위기다.

우선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 개선은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 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게 핵심이다.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묻지 않 는 것이다.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막말 파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 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됐다.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개헌 사 항이지만,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 회법 개정이나 국회 윤리규칙 등으로 다 룰수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 회 본연의 기능을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 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면 책특권의 경우 불체포특권과 달리 국회 의원 신병(身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 다 의정 활동만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믿을 만 한 근거나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 는 것도 중요하다"며 면책특권 제한에 신 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면 책특권 제한은 정부를 감시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야당 본연의 기능을 봉쇄하겠 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국회 또는 당 차 원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거나 언론을 통 해 정치적 ·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바 람직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는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방안 이달 발표

#### 국회 규율에 반영키로

최근 상당수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 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이에 대 한 자체 규제 방안을 이달 중에 내놓기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 규 개정안'을 앞으로 1~2주 정도의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

에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 처는 우선 외국 입법부의 국회의원 친인 척 채용 관련 규정 및 현황 등을 찾는 데 서 시작해 국내 다른 공직 분야에서의 각

이렇게 마련된 규제 방안은 '국회 규 칙'에 그 내용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 린다. 입법 과정을 거친 정식 법률안보다 는 국회 내부 규율을 다루는 국회 규칙이 더 알맞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종 윤리강령 등도 참고할 계획이다.

하겠다고 3일 밝혔다.

## '김영란법' 의원로비 예외조항 삭제 추진

## 강효상 의원 개정안 마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논 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학교의 교원 과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 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강 의원이 다음주 제출할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제3자 민원을 전달 하는 일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했다.

김영란법 제5조는 15가지 유형으로 부 정한 청탁을 금지하면서 7가지 예외를 뒀 다. 예외 중 하나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 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 의하는 행위'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인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의 상품기 전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I ●여행 유의 ●여행 규외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 HanaTour.com